

‘위험’만 떠넘기고 권한은 없어 지역 불신·불만도 더 쌓여간다



<하> 원전 정책에 '지역은 없다'

원자력발전소에 쌓이는 폐연료봉(사용 후핵연료)의 양만 큼이나 정부와 한국수력 원자력에 대한 지역의 불신·불만도 쌓이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와 발전소 수명 연장 등 주요 정책 결정은 물론,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역시 중앙(수도권)에서 틀어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후쿠시마, 옛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고 발생시 1차 피해는 원전 소재지역이 따르고, 국내 원전에서의 고장·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요 정책결정에 지역 참여를 늘리고 원전 규제 권한도 일부는 지역에 넘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 고리원전(부산), 월성원전(경주), 한울원전(울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지방에 있다. 한빛원전력본부 등 4개 본부 23기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은 국내 발전량의 31.5%(2015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전력공급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순기능의 반대편에는 항상 위험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원전 고장·사

한빛원전 고장사고 166건 달해

원안위 역할·관리감독 등 의문

주요 정책 결정과정 지역 소외

전문가들 “권한 일부 이양해야”

고, 핵폐기물 처리 등이 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7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원전에서 일어난 고장사고는 한빛원전 166건, 고리원전 303건, 한울원전 126건, 월성원전 112건 등 707건에 이른다. 원안위의 노력에도 매년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탓에 원안위의 역할과 규제 의지에 의문을 표시하는 지역주민이 늘고 있다.

원전 운영에 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원안위가 원전검사 전문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의 수백명의 인력을 거느리면서 원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데도 고장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인 총리 산하에 있는 원안위를 국회 소속으로 옮기거나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안위의 권한 일부를 원전이 있는 광역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전 가동이 위험하다는 합리적 수준의 의심이 있을 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조사하고 발전소를 세우거나 가동을 늦출 수 있는 권한

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원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이 소외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시적 정부기관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의견 수렴을 했다.

하지만, 영광지역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정책방향을 이미 수립해 놓고 형식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참여를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 원전 도입 이후 30여년간 역대 정부 누구도 최종 처분장의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되고 원전 가동 중단을 위협하려고 하자 정부(산업자원통상부)는 최근 사용후핵연료 처리 로드맵(7분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계획대로라면 발전소 부지에 단기 저장시설을 건립해야 하는데다 자칫 이 시설이 영구저장장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정운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기계공학 기술사)는 “영광을 비롯한 원전 소재지역 주민들은 위험은 자신들이 가장 많이 떠안는데도, 주요 정책결정이나 안전관련 부문에서 지역이 소외되고 중앙에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원전 관련 갈등과 사고고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수원, 핵폐기물 보관료 내라”

경주엔 연 30억 지급...30여년 보관 한빛원전 제외 영광군 반발

“한빛원전 수조에 30여년간 쌓여있는 폐연료봉은 왜 보관료 지불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로드맵(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역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에 쌓아두는 자치단체에 일종의 ‘보관료’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30여년간 발전소 수조(물탱크)에 보관 중인 수천달의 폐연료봉은 제외하고 신규 저장 시설에 저장하는 것만 지원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광주일보 6월7일 1면)과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논란은 보다 분명해진다.

9일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로드

맵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포화되는 한빛원전을 포함한 3곳의 발전소에는 지역과 한수원의 논의를 거쳐 부지 내에 단기 저장시설이 새롭게 건설된다.

정부는 원전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보관료를 내는 방안을 한수원에 제시했다. 문제는 보관료 지불의 대상이 발전소 부지 내 들어설 단기저장시설에 쌓이는 사용후핵연료에 한정하고, 각 발전소 수조에 30여년 이상 보관 중인 것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핵연료는 일정기간 수조에 저장돼 열과 배출되는 방사선량을 줄인 뒤 부지 내 신규시설로 옮겨지는 구조”라며 “위험성이 큰 수조 속 핵연료는 빼놓고 신규시설로 옮겨간 핵연료에 대해서만 보관료를 준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보다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 과정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은 더욱 분명해진다. 한수원이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 옷가지, 필터 등 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반입할 때 200ℓ 드럼 1개 당 63만7500원의 수수료(보관료)를 경주시(75%)와 방폐장(25%) 측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방폐장이 들어서 이후 연평균 30억원가량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돈으로 경주시 전체 12만 가구의 TV수신료, 전기 기본요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위험부담이 있다면 그만큼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을 비롯한 전국 원전 소재 자치단체는 그간 맞춤형 사용후핵연료 보관료를 달라고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해왔다”면서 “그간 대책 없이 쌓아둔 핵연료에 대한 보관료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지하철역서 열린 취업박람회

9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지하철역에서 열린 '2016 미니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상담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12개 중소·중견업체가 참여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현장 채용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입으로만 사기 친 ‘현대판 붕이 김선달’

있지도 않은 물건 팔아준다며 수천만원 가로챌 30대 구속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챌 ‘현대판 붕이 김선달’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 사기범은 하루 전 자신이 판매한 외제 중고차량을 2배로 되팔아주겠다고 차량 등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자동차를 비롯해 카메라·노트북·유명 야구용품 등을 고가 또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챌 혐의(사기)로 고모(3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20일 A씨에게 2770만원을 받고 외제 중고승용차를 판매한 뒤 하루 뒤 전화를 걸어 ‘전날 당신이 구입했던 차량을 4100만원에 구입할 사람이 나타났다.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넘겨받는 가 하면 취·등록세 등의 세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1830만원을 받아 가로챌 혐의다.

고씨는 또 2014년 11월 카메라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선금급 2550만원을 보내주면 카메라 분체 10대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챌 혐의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고급카메라 분체·유명 야구글러브·노트북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6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고씨를 각자 고소했다.

이 과정에 불구속 송치된 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고씨가 비슷한 내용으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건 피고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씨에 대한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중고거래의 익명성과 신뢰관계를 악용,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지속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93명...28명은 사망

지난달 현재 광주·전남에서 조사 또는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93명이며 이 가운데 28명은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실태를 발표했다.

4차 접수까지 누적해 광주는 사망 17명·생존환자 31명 등 모두 48명, 전남은 사망 11명, 생존환자 34명 등 45명이었다.

광주의 경우 2011~2014년 1~2차 조사에서 12명(사망 9명)이었고 지난해 3차에서는 18명(사망 5명), 지난해까지 올해 4차 조사에서는 18명(사망 3명)이었다.

전남에서는 1~2차에서 10명(사망 4명), 3차에서 15명(사망 1명), 4차에서 20명(사망 6명)이 접수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더민주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차 접수자는 전국적으로 1057명(사망 238명)으로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2339명(사망 464명)이었다. /김형호기자 khh@

나주시의회 의장 항소심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9일 명절에 동료 의원과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주시의회 홍철식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되지만, 홍 의장은 그 이하의 형을 받음으로써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홍 의장은 지난해 설 명절에 동료의원 13명과 주민 65명에게 2만원 상당의 한라봉 과일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명절에 형의 선물을 돌리는 게 관행인 점 등을 들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포폰 명의 대어 대학생들 “어이구”

○...대학생 등의 명의로 100여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

○...순천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기종에 따라 25만~30만원을 주겠다고 홍보해 대학생 명의로 100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1대당 70만원을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A(25)씨 등 유통조직원 5명과 명의를 빌려준 대학생 B(20)씨 등 22명 등 27명을 입건.

○...B씨 등 대포폰 명의 대어자들은 1대당 25만~30만원을 받고 1인당 3~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줬다가 더 많은 벌금을 뜯겨 버렸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 상가건물 주택 나대지 임야 구함 062-714-2251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감정가7억9천6백 최저가 5억5천7백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 담양 무정면 봉안리 공장 대지 6,552㎡ 건물2,473㎡ 감정가 13억9천3백 최저가 7억8천
- ★ 광주 서구 쌍촌동 운전역인근 5층숙박시설 대지298㎡ 건물1,206㎡ 감정가 12억2천5백 최저가 5억4천9백 (감정가45%)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삼성전자인근 공장 대지 3,293㎡ 건물 1,495㎡ 감정가 17억5천1백 최저가 12억2천5백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1,261㎡ 감정가2억1천6백 최저가 8억5천1백 학원 식당 운영중
- ★ 함평 해보면 용산리 공장 대지 3,306㎡ 건물1,977㎡ 감정가 26억1천1백 최저가 14억6천2백
-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영암버스터미널 옆 대지1,948㎡ 일반상업지구 대로변 투자 최적화 감정가 8억8천6백 최저가 8억8천6백

수익형 추천 물건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희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을 매매27억(용13억포함),월 천4백만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58억(용28억포함),수익성 월평균 8천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 옆 매매13억5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 매매 48억 (요양병원허가특)
- ★ 광주 산수동 대로변 병원건물 대지596㎡ 건물948㎡ 주택86㎡포함 매매 12억5천만원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매매40억 (보증금 2억3천, 월2천7백)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집방3개 매매6억3천 대출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백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24억원
- ★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용18억 매매 48억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30억선 교환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 신축 4층건물 대지 239㎡ 건물 564㎡ 1층 점포3개 버스정류장 앞 주변 아파트 신축중 매매 14억원
- ★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 매매 20억원

20년경력/부동산 매매,임대/전지역 신속 책임 중개/경,공매 NPL 컨설팅 010-6211-4585 조여사